

## 당원 및 당비 규정

2020.3.12. 제1기 전국운영위원회 제정  
2020.9.28.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1차 개정  
2020.10.26.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2차 개정  
2020.11.23.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3차 개정  
2022.5.28. 제2기 전국운영위원회 4차 개정  
2024.11.2.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14차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2장(당원)에 따른 당원의 입당과 탈당, 활동,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이 장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원 및 당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당원의 구분)** ① 일반당원은 해당 광역시·도당(이하 “시·도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이 관리하는 당원을 말한다.

② 권리당원은 본 조 제1항의 당원 중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③ 예비당원은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 당원을 말한다.

### 제2장 입당·이적·복당·탈당·재입당

**제4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일 경우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중앙당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당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한다.

1.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2. 전자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3. 홈페이지 혹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형태의 제출방법

③ 입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의 성명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5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시·도당에 편재된다.

**제6조(이적)** ① 소속 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시·도당 이적은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이적 신청을 받은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당에 통보하고 이적 신청을 처리한 후 신청을 한 당원에게 알려야 하며, 당원이 옮겨가는 시·도당 또한 이적 신청을 통보받았음을 이적 신청을 한 당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복당)** ①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국운영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동조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등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규정 또는 회사 사규 등에 따라 어떤 정당의 당적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경우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제8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9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10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탈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때 심사는 서면, 대면 모두 가능하다.

-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의 입당, 복당, 탈당, 이적에 관한 사항의 조사·심사 및 판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입당·이적·복당 등의 심사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당부인 경우
2. 시·도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경우
3.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4. 시·도당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지역위원장,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또는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당대표단이 중앙당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경우
7. 입당·복당·전직 신청자가 현직 국회의원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

**제11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임명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대표가 임면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원명부관리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④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따른 당원자격심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시·도당 위원장 또는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구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의 결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12조(당원자격 심사기준)** ① 당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의 공개적인 행동이나 의견이 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지 여부
3. 재입당 신청을 한 당원이 이전에 당에 명백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기위원회 피제소 사실의 기록이나 징계처분 결정을 받았던 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그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당원자격 심사의 기간은 입당 또는 재입당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당원자격 재심사)** ① 시·도당으로부터 시·도당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 제4장 당원관리

**제14조(당원명부 작성)**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다.

②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 시·도당은 매달 1회 당원명부를 중앙당에 보고한다.

**제15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명부는 전산자료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당의 대의기구의 결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 담당자는 입당, 재입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공 받은 당원정보는 영리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중앙당과 시·도당은 전산자료에 당비 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1년 6개월간 보유할 수 있고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당이 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단 제명당한 당원을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3년간 보유한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5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17조(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당비납부를 시작한 때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권리당원의 10분의 1이상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권리

**제18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4. 당원으로서 성인지감수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

## 제6장 당비

**제19조(구분)**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20조(일반당비)** ① 일반당비는 권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권리당원은 매월 1만 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월 5천원의 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6개월 마다 한 번씩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직책당비)** ① 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말하며 세 부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②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은 공동대표가,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시·도당 운영 위원회가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당비)** 특별당비는 당의 발전을 위하여 당원이 일반당비 이외에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제23조(당비납부방법)** ① 정기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미인출된 정기당비에 대하여는 분기(3개월)별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 제7장 당 재정의 배분

**제24조(납부방법)** 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제25조(당 재정의 배분)** ① 당 재정의 수입은 중앙당 당직자 및 시·도당 당직자의 임금을 공제한 후 당비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협의로 분배한다.

② 당내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은 균형재정을 실현해야한다.

③ 직책당비의 수입은 전부 중앙당에 귀속된다.

④ 특별당비는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에 따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귀속된다. 다만 납부자가 어디에 귀속시킬지 특정하지 않은 특별당비는 중앙당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도당은 자체 규정에 따라 기초지역당원모임에 당비를 배분할 수 있다.

## 제8장 관리 및 보고

**제26조(영수증)** ①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말까지 납부일자, 금액 및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한 당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이를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 및 보고)** ① 모든 당비는 사무총장이 관리·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매월 공동대표에게 당비납부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조(효력)** 본 당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권한)** 제17조(당원의 권리)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한해 권리당원은 당비를 1회 납부한 때로부터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